

「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」 개선 주요 내용

(2007. 2. 1 시행)

1. 손실보조 수수료율 조정

□ 경제협력 손실보조 수수료율 : 현행 연 0.7% → 연 0.5%로 인하

- 손실보조 수수료를 인하하여야 한다는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
- 기업이 손실보조 약정한도인 50억원 약정체결시, 기업들은 연간 약 800만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
- *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 모든 기업들이 손실보조비율 최대한도까지 약정

【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액 현황】

기본 수수료율	중소기업 우대적용율	실제 중소기업 수수료율	수수료 납부액	경감액
0.7% (현행)	25%	0.525% 【0.7% - (0.7 × 0.25)】	2,600만원	-
0.5% (인하)	25%	0.375% 【0.5% - (0.5 × 0.25)】	1,800만원	800만원

- * 할인율 : 기본요율×중소기업 적용율(25%)
- * 손실보조수수료율 결정체계 : 기본요율 - 할인율

□ 교역 손실보조 수수료율 : 현행 연 0.9% → 연 0.8%로 인하

2. 약정절차 개선

□ 약정신청기한 폐지: ‘투자승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’ → 삭제

- 대북 투자의 경우 통상 1~2년간에 걸쳐 10차례 이상 분할 투자되고 있는 투자실상을 반영, 기업이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약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약정신청기한을 폐지
- 다만, 약정해지의 빈발을 막기 위해 약정해지 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경과기간 동안은 약정이 불가능하고 두 차례 해지 후에는 다시 약정하지 못하도록 규정

□ 약정체결시점 변경: 투자실행 후 건별 약정 → 포괄약정 후 건별 발효

- 현행 투자시마다 1개월 이내에 매 투자 건별로 약정하던 것을 협력사업 승인내용에 근거, 포괄약정하고 실제 투자실행 후 6개월 이내에 투자사실을 신고하여 건별로 약정 발효

□ 약정신청자 요건 완화: 기업신용평가 및 업력 1년 이상 요건 삭제

- 경험 손실보조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하지 않고 약정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절차 간소화
- 경험 손실보조는 북한에 의한 ‘비상위험’만 담보하므로 투자기업의 신용도가 본질적인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등 고려
- 또한, 경험 손실보조는 신설기업도 투자가 가능하고 이 또한 본질적인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업력 1년 이상의 요건을 삭제, 불필요한 제한사항을 폐지

□ 약정기간 연장: 현행 최대 10년 → 10년 단위로 재연장 가능

- 경제협력사업 지분투자는 10년 이내에 투자금액의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가능성이 많으므로 당초 약정기간 동안 제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약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재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

□ 손실보조수수료 징수방법 개선: 매년초 연간수수료 일괄선납 → 每 분기초 징수

- 대북 거래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

3. 담보위험 범위조정 및 약정제한 조건 구체화

□ 담보위험 범위 조정: ‘불가항력위험’(남한이 체결한 조약 및 국제법규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3월이상 사업정지)을 신설

- 현행 규정상 북한이 남북당국간 합의를 파기하고, 남한당국이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손실보조 가능성에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
 -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당국의 조치는 북한당국의 남북당국간 합의 파기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담보위험 범위에 ‘불가항력위험’을 별도 신설
 - * 현행 손실보조의 대상이 되는 ‘담보위험’은 수용, 송금, 전쟁, 약정불이행위험으로 원칙적으로 북측의 조치만이 대상이므로 남한당국에 의한 사업 중단시에도 손실보조가 가능토록 명시하여 우리기업을 보호

□ 약정신청 제한조건 구체화: ‘북한에 비상위험이 현존하고 있는 경우’ → ‘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비상위험이 현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’

- ‘비상위험의 현존여부’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으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판단주체를 명확화
 - 현행 규정상의 약정신청 제한조건인 ‘북한에 비상위험이 현존하고 있는 경우’는 판단주체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.
 - 또한, 비상위험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판단주체의 의사결정에 대한 기준 제시
 - * ‘비상위험’이라 함은 ‘북한의 투자재산 몰수·박탈, 환거래 제한·금지, 전쟁·혁명·내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, 남북당국의 사업중단 조치 등 약정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투자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위험’

4. 손실보조비율 조정

□ 교역 손실보조비율 조정: 현행 약정가액의 50%(일률적 규정) → 비상위험만 담보시 약정가액의 70% 가능

- 현행 교역 손실보조비율은 약정가액의 50%로 정해져 있어 남북교역 기업이 비상위험만 담보토록 희망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음.
- 경제협력 손실보조와의 형평성을 감안, 비상위험만 담보하는 경우, 손실보조비율을 약정가액의 70%까지 가능하도록 개선
 - * 남북경제협력 손실보조비율은 현행 70%임(개성공단 등 경제특구 지역은 90%)

5. 관련 규정체계 간소화

- 3개 「취급기준」 및 6개 「약관」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규정체계를 「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취급기준」과 「교역 손실보조취급기준」 등 2개의 취급기준으로 통·폐합하고 간소화